# 광주지방노동청, 노동자 위한 기관 맞나

감독관 1명이 1574곳 관리 부당행위 감시 시실상 손놔

### 실업급여 만료될 때까지 재취업 비율 절반도 안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무책임한 행태 가 도마에 올랐다. 청년 취업 및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을 상대로 '甲'질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4

및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이 관할 사업장 1574개를 맡아 부당노동행위 등을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원으로보 면 1만2189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단 한 명 의 근로감독관이 챙겨야 한다는 것으로, 제대로된 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나 노동자 실태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이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임금 체불 노동자(255명) 중 117명(45.9%) 의 체불 문제를 해결한 게 고작으로, 신고 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들여다보지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만하다.

지역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소

극적이기만 하다.

주청의 취업지원사업은 단 2차례에 불과 하다고 밝혔다. 산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 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려는 활동은 아예 찾아볼 수 조차 없다는 게 주 의원 주

이러다보니 고용노동부의 '시·도별 소 정실업급여일수 만료자 현황 자료'에 따 르면 지난해 광주청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중 절반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도 무관치 않다.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소정실업급여일수 만료자 현 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 주지역 실업급여일수 만료자(미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50.3%(1만9012명)로 전국 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도 미흡한 수준이 라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면서 노동자 들을 대하는 처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청 의 간접고용 용역계약서를 받아 분석한 결 과, 광주청 및 산하지청 중 시중노임단가 (시급 6949원)를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곳은 전무했다. 더 나아가 '노사분규 발생 시 용역근로자는 최선을 다해 분규를 해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광주청), '잡담과 콧노래를 하지 않고 복도에 앉아서 쉬지 않도록 한다'(목포지청)는 부당한 조항까 지 용역계약서에 포함시켜 비판의 목소리 가 터져나오고 있다.



14일 광주시 남구 구동의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단풍이 빨갛게 물든 나무 아래에 앉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여성들의 '가을사랑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순천 신대지구, 코스트코 공공용지 특혜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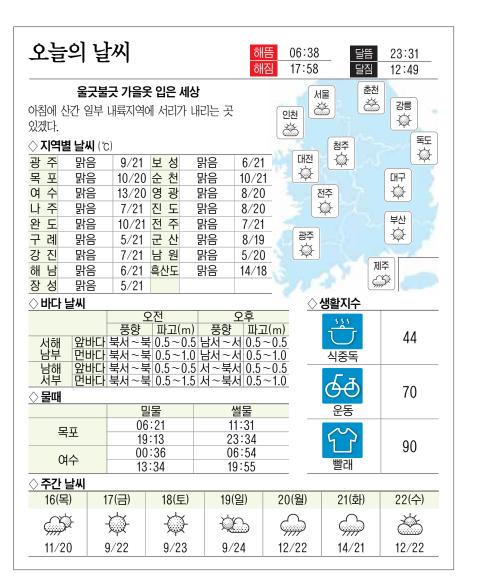
#### 순천·광양시민단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검찰 고발

여수·순천·광양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 단체로 결성된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 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검찰에 고

범대위는 고발장에서 "감사원 감사 결 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에 대해 공 공시설 용지에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일로 밝혀졌다"며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 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 사실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주 기관인 순천시와 협의했어야 함 에도 내용을 일부 은폐해 순천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 방해)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사업추진협약서에 명시된 유보지의 무상 양도는 물론 매각대금이 순천시 회계에 편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직무유기, 배임) 등을 적

범대위는 "신대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시점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광양만권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가 높았던 때"라며 "법을 어기고 공공시설 용지를 팔아먹은 사실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청과 ㈜순천에코밸리 결재권자가 모르고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 였다.한편 코스트코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 리 2만637㎡의 터에 건축 면적 1만3933㎡, 전체면적 3만6944㎡에 5층 규모로 '코스 트코 순천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 난 3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교통부문 혼잡을 보완하 는 등의 조건부로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했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한빛원전 방사능 어디까지 날아갈까?

지역 환경단체 20일 '방사능 풍선날리기' 행사 1000개 날려 30km이상 지점 표시…지도 제작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다면 방사능은 어디까지 날아갈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 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관한 우려가 커 지는 가운데 지역의 한 환경단체가 방사 능의 폐해를 공감하자는 취지로 '방사능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방사능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풍선 1000개에 쪽지를 달아 한빛원전 에서 날린 뒤 28일까지 풍선이 떨어진 곳을 제보받아 풍선이 날아간 지점을 표시해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쪽지에는 '이 쪽지는 영광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방사능 확산범위를 알아보 기 위해 풍선에 매달려 날아왔습니다. 방사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 는 문구를 담았다.

풍선 쪽지 제보는 영광 한빛원전 인

근인 영광군과 고창군은 제외되며, 한 빛원전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받는다.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관계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능 피해 에 따른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에서 20~ 30km로 확대된 뒤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을 앞두고 원전 측이 '방사능 확산 시물 레이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역을 재 설정할 것이 걱정된다"며 "11월로 예정 된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을 앞두고 광주 시, 전남도, 전북도 등 기관이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행 사"라고 말했다.

문의 및 제보 062-514-247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